

정부, 불산가스 누출사고 본격 수습

종합대책반, 복구·보상·장기조사 주력 ... 피해규모 커 보상 장기화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발생 16일째를 맞아 정부와 구미시가 본격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종합대책반과 구미시는 사고에 따른 긴급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복구, 보상, 장기조사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월12일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구미코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월11일 정부의 보상기준이 발표되는 등 변곡점이 지났다고 보고 구미의 본모습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구미시는 조만간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공장 안에 있던 탱크로리를 철거할 방침이며, 경상북도는 사고발생 인근지역인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지역의 가축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농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해 불소 잔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도 해당지역의 소 22마리를 구입해 3년 동안 시험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지점 반경 1.5km 이내의 주민 1100명과 근로자 400명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진행해 1단계로 12월14일까지 설문조사와 검진자료를 분석한 뒤 2013년 7월 말까지 정밀 건강영향평가와 추적·확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도 10월9일부터 환경오염측정지점을 선정하는 등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들어갔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10-12일 구미4국가산업단지 소재 141개 사업장의 불산오염도를 측정해 10월18일께 분석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과 성품 기부도 이어져 현재까지 2억1000여만원의 쌀·생필품과 2억9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12일 오후 사고현장과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확인했으나 집단 대피한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피해보상, 기업체 피해보상 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봉산리 주민 105명과 임천리 주민 162명 등 267명은 10월6일부터 구미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머물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대책본부는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피해기업 역시 건물 손상과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2>